

무료 와이파이 등 돈 더 푼다 vs 재정건전화 대전환

〈與〉

〈野〉

與野, 21대 총선공약 비교

민주당, 2년내 5만3000개 구축 정보격차 줄이고 가계통신비 경감
한국당, 관치경제→자율경제 전환 '재정건전화법' 적극추진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 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한 정치권이 공약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와이파이 구축 등 생활 복지에,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화 확대 등 경제 정책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이 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사용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취약계층의 정

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시내버스 5100대에 추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2956개의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2358교 등 5300개소에도 추가로 달겠다는 구상이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경우 2000개소를, 문화·체육·관광시설에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에도 추가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은 물론 공약도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구

성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당내 정치연구기관 민주연구원과 서울 인근 3기 신도시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구성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와 20·30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청년특별예산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같은 날 "대한민국 경제가 빈사 상태"라며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먼저 "복지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해 3년 뒤에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주력산업

위기 가속에도 대안이 없어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첫 공약으로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 관념 전환 ▲기업 지원 집중에서 사업 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의 개선을 목표로 희망 경제 공약 발표 등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먼저 재정을 건전화해 운운해 미래 세대에 떠넘겨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존 재정운용제도와 법령의 재정건전화 관리 범위를 넘어선 재정 환경의 본질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 재정 총량이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한국당 첫 공약이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을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 도입이다.

채무준칙의 경우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계획이다.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 +0.5% 이하'로 한다.

두 번째 공약은 탈원전(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폐기해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한국당 목표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딱 막힌 경제 활판에 피가 돌게 하겠다"며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 정책 마련을 내걸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與 '이낙연 6년만의 귀환' vs 野 '혁통위 통합가속'

총선체제 접어든 정치권

이낙연, 내달 초 종로구 이사 예정 황교안 "미워도 모두 합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5일 제1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본격 총선체제에 접어들었다. 집권여당에선 '총선 간판'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복당했고, 보수권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이 전 총리가 함께 자리했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 지사에 선출된 후 6년만에 복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먼저 "이 전 총리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헌신하시고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세우셨다"며 "이 전 총리의 경륜·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복귀해 역할을 해주실 텐데 당으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환대했다.

이 전 총리는 "앞으로 매사 당과 상

의하며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문화상 국회의장도 예방해 여의도 복귀를 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임기를 마친 후 총리공관에서 나와 서울 잠원동 자택으로 갔다. 이 전 총리는 2월 초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전 총리의 이사

에 대해 총선 출마 지역구와 연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 전 총리는 "(이사 이유가)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청년 시절 제일 많이 산 곳"이라고만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당 상임고문으로도 위촉돼 당사에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보수권에선 통합 논의가 기로에 섰다.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

합추진위원회는 전날 첫 야권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이날도 "미워도, 싫어도 지금은 모두가 합해야 할 때"라고 거듭 밝혔지만, 새보수당은 '당 대당' 통합 의지를 밝히면서도 통합 방식엔 이견을 보였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15일 제1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황 대표가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에 탄핵의 길을 건너고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다"며 "새집을 지으려면 당연히 집을 허물고, 집주인도 새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현재 보수권이 논의하는 통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측근 김도식 비서실장을 통해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총선출마 위해靑 떠나

이번주 총선인사 마무리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의 교통정리가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형철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다가올 총선을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 보좌관은 대전 출마가 유력하다. 주 보좌관은 대전 동구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주 보좌관은 대전 동광초와 충남중, 대신고,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출마 지역은 당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주 보좌관은 40대 나이에 SK그룹 계열사 CEO를 지낸 실물경제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 정부 때 경제보좌관으로 발탁, 재계·정계간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핵심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주도하는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작년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대변인직을 맡은 3인(박수현·김의겸·고민정)과 춘추관장직을 맡은 2인(권혁기·유송화) 모두 다가올 총선에 출마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유승준 기자 dn1114@

'18세 선거' 참여위해 유튜버와 협업

선관위, TF구성·대응계획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태스크포스(TF·특별임시조직)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응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F 구성을 통해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 관여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할 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 지급하는 내용을 안내해 신고·제보도 독려하기로 했다.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유명인사)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새내기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웹툰·랩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를 찾아가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스터·현수막·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자발적인 선거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전담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는 고발하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

계와 훈방 등의 조치를 하되, 반복할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시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 참여 정당이 증가할 것인 전망에 대비해 반복적인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하고 장비·인력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대성 기자